

## 공주시, 돌고도는 ‘괴물 전광판’ 시민 안전 무시하는 ‘능장행정’ 공주시장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언론의 수 차례 지적 요청에도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언론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김정섭 시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CTN은 공주시 봉황동 별관 ‘괴물 전광판’으로 ‘빛 공해에 야간에는 눈이 부셔 교통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주시‘괴물 전광판’ 만들어내는 공주시장』, 『공주시, 시민 형세 ‘평평’...괴물 전광판 줄 대는 공주시장』이란 제목으로 전 광관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공주시 측은 보란 듯이 공익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도로 전광판에



버젓이 상업광고 게시물을 돌리는 등 번축을 사고 있다.

공주시가 ‘시민’보다 ‘대통령령’이 먼저임을 앞서 반증하듯 기간이 30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아 시민들은 공주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김정섭 시장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능장 대응, 리더

십 부재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의명을 요구한 공주시청 관계자 A는 “시청앞 전광판은 소동담당관실이 해당 관리 부서로서 앞서 해명자료를 보도 한 절차는 해당 광고물을 규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이고, 당조업자와의 유착 때문이라면 문제는 매 우 심각해진다”며 난감해 했다.

관계 공무원 B는 “선거철을 앞두고 김 시장의 행정처리가 나태해진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앞장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도록 해야 하는데, 시장이 선거철을 앞두고 직원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맹민준 기자

## 충남도, 금속·화학산업 ‘저탄소 전환’

2045 탄소중립 맞춰 ‘충남 금속·화학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충남도가 대표적인 탄소 다량 배출업종인 금속·화학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견인한다.

도의 ‘2045 탄소중립’ 정책에 발 맞춰 앞으로 5년 동안 2600억여 원을 투입, 지속가능한 금속·화학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 금속·화학산업 육성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 새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금속·화학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와 포럼, 금속·화학 관련 업체가 밀집한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입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전은 ‘금속·화학산업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으로 잡았다.

목표는 ‘지속가능한 금속·화학산업 생태계 완성’으로 설정했다.

세부 목표는 △중견기업 7개사 육성

△고용 창출 7000명 △해의 수출 10조 원 증가 △지식재산 500건 확보 등이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탄소중립 대응 첨단 소재 성장 기반 구축 △소재·부품 자립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 조성 △신산업 대응 첨단 소재 기술 개발 지원 △보건·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을 내놴다.

추진 과제는 △탄소 저감형 첨단 금속 소재부품 △플라스틱 자원화 △탄

소자원화 소재 고도화 △전력 회소금속 △유연 뿌리기술 △항균 및 항바이러스 제품 상용화 지원 등 14개다.

투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2677억 7000만 원이다.

각 과제 실현을 위해 도는 연차별로 국비를 확보하고, 산업부 공모에 참여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탄소 업종인 금속·화학산업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탄소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공모 참여를 위한 기획 작업 등에 본격 착수에 추진과제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진 기자

## 충주시, “노인 맞춤 돌봄” 큰 호응

보건복지부 노인정책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충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노인정책분야 지자체 평가’을 운영해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750만 원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공기관을 표창해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246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간 노인 돌봄 분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실적 등을 토대로 유공 기관을 선정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홀몸노인의 마음 방역을 위해 원예치료사업, 반려 식물 키우기, 추억의 장바구니, 우울 예방 행

북 인형·복주머니 만들기 등의 사업 운영해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로봇을 활용한 24시간·실시간 스마트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돌봄 활동이 가능한 비대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으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적극 행정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길형 시장은 “앞으로도 노인이 살기 좋은 건강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우 기자

## 아산시, 콘텐츠 산업 2년 연속 ‘A등급’

아산시가 지원하는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충남글로벌게임센터가 2년 연속 사업성과 평가 ‘A등급’을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지역 거점형 운영 평가에서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A등급을 받았으며, 이어 충남글로벌게임센터 도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이로써 두 개 센터 모두 2년 연속 A등급의 쾌거를 달성하게 됐으며, 2022년에 국비 6억7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으며 총 국비 28억7000만 원을 확보했다.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완료하고 체계적인 기업 육성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액셀러레이팅 전문가와 협력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바이벌 사업고도화 지원을 통해 우수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입주기업 매출 161억 원을 달성했고 투자유치도 역대 최고치인 88억원을 달성했다.

충남글로벌게임센터는 중소 우수 게임기업 중 4:1의 평균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게임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 게임사가 센터에 입주했다.

이중 누적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6개사가 포함돼 있으며, 소프트랜칭이 완료된 2021년 제작 지원 게임은 상용화 전에 이미 퍼블리싱 10억원 계약, 투자유치 10억원을 달성해 도내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다졌 다는 평이다.

전병관 시 복지문화국장은 “두 개 센터의 2년 연속 A등급 달성은 아산 콘텐츠 산업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념비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콘텐츠 기업을 발굴 지원해 지역의 콘텐츠사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우 기자

## 서산시 천수만, 세계적 철새도래지 ‘명성’

천수만 겨울 철새 주요 먹이터, 다양한 철새 방문



▲ 지난해 12월 서산 천수만 먹이경작지에 날아든 철새

〈제공=서산시〉

서산시 천수만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독수리, 노랑부리저어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철새들이 서산 천수만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하루 3~4만 개체의 철새들이 몰려들어 장관을 연출했다.

이는 시가 먹이공급 사업, 야생조류 충돌방지 스티커 부착, 빛질존치, 무논조성, 밀렵감시 활동 등 야생조류 보호활동에 총력을 쏟아온 결과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천수만A지구 휴경기 10ha에 벼를 재배하게 하고 수확물은 논에 그대로 존치하는 철새 먹이공급 사업이 특목한 역할을 했다.

/한성진 기자

## 괴산군, ‘미래농업 육성’에 박차

농업예산 1163억 원 편성 ‘농업경쟁력 강화’

충북 괴산군이 올해 농업·농촌 예산에 1163억 원을 편성하고,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대비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농업 예산 1000억 시대를 맞이한 괴산군은 1406억 원(3회 추

경 기준)을 농업·농촌 예산에 편성하며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올해 농업·농촌 예산은 전체 본예산(5456억 원)의 21%인 1163억 5756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991억 1373만원과 비교해 172억 원

(17.4% ↑) 가량 증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환형 유기농업군으로서 괴산군은 전국 최초로 농산물을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군에서 관리하는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를 정착시키고, 매년 전환형 인증면적을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전환형 인증면적은 548.5

ha(5.2%)로 3년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경지면적의 10%인 1100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2022세계유기농산업을 육성하는 성공적으로 개최해 친환경유기농업군의 위상을 높이고,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비해 다방면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우 기자

##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문 대통령 신년사에 ‘입장 발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선, 이하 위원회)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2 임인년 새해를 맞아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내용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해온 균형발전 분야는 세 번째 삶의 질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조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조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 측은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준의 특단의 종합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중에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라도 확정·발표해 차기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

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일극체제를 다극분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광역 협력 사업을 요구·지지하면서도 가치적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0여년이 소요되고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수도완성 등의 신속한 결단과 함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우리사회 전 분야의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는 통합적 균형발전을 거듭 촉구해 왔다”고 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기한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면서 거둬들인 정부 임기 중에 이 전계획을 확정·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후보와 정당에게 대선 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등의 통합적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채택해 서면으로 확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금현 기자

## 예산낭비 인가? 제대로 된 해결책인가?

충북도, 코로나19 재택치료 이동형음압기 설치지원

충북도가 코로나19 재택치료의 안전과 가족·이웃 세대 간 추가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가정 내 이동형 음압기 설치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중인 재택치료는 백신접종에 따른 무증상 확진자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 대응 역량 소진 문제 해결과 최근 감염 폭증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자칫 부주의한 격리 치료로 함께 거주하는 비확진 동거인에 대한 추가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충북도는, 이러한 재택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역 감염병 대응장비 제조사인 우셋(대표이사 이명식)과 협력해 5일 도내(청주시) 재택치료 1개 가정에 전국 최초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했고, 향후 이동형음압기 시범설치 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택치료 이동형음압기 설치사업은 재택 내 별도 격리공간에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 가정 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 음압 시설을 통해 정화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이웃 세대 간 감염도 원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보건소를 비롯한 재택치료 가정에 이번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며, 가정 내 이동형 음압기 설치를 희망하는 재택치료 세대는 관할 시군 보건소를 통해 도에 이동형음압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가정 내 음압시설 설치가능 여부와 면적에 취약한 소아, 장애, 60세 이상 비확진 동거인 수 등을 생활 여건을 종합 고려해 지원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만 A씨는 “코로나19 올바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 재택치료 이동형음압기(시범사업) 설치 모습 (제공=충청북도)

든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2년 넘게 무엇을 했는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커녕 오로지 하루 확진자가 몇명인지에 대해만 보도, 확인, 각인 시키기에 바빴던거 아닌가? 묻지않을수없다”고 말했다.

B의사는 “상식적으로 병원가서 치료를 받을때는 몸이 아파 찾는 것인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무조건 검사받게하고, 받고나면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지금이 검사 결과”라며, 의외의 간단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검사받지 않으면 코로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COVID-19 의심되면즉시검사”는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며, “충북도에서는 가정에 ‘이동형 음압기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집이 작아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재,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와 방역패스 확인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위한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거리두기 저녁9시 시간제한은 하나마나한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다 죽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철우 기자